

姜시장 “AI산업·군사시설 이전·양궁대회 참석해달라” 金지사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을”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광주시·전남도,李大통령에 현안 건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요청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 주요 현안 지원을 건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는 이 대통령, 강 시장, 김 지사 등 17개 시·도지사,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AI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AI컴퓨팅센터 신속 공모 등 AI산업 주요 현안과 광주군공항, 마북동 탄약고, 평동 포사격장, 무등산방공포대 등 군사시설 이전 현안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이끌 산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광주가 AI 1단계 사업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AI컴퓨팅센터 신속 공모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는 연 4천여명의 AI·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고 있고 이러한 인재 양성을 기반으로 200개 AI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중 158개 기업이 광주에 사무실을 개소해 637명이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특히 “국가AI데이터센터를 통해 현재 900여개 기업이 2천여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속도와 집적이 가장 중요한 AI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현 집적단지 인근에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유찰된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사업도 신속히 추

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광주군공항, 마북동 탄약고, 평동 포사격장, 무등산 방공포대 등 군사시설 이전을 재차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주시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강 시장은 간담회 이후 이어진 오찬장에서도 오는 9월3일 개최 예정인 광주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오프닝 쇼에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대통령에게 여수·광양항 북

극항로 거점항만 육성을 적극 건의했다. 김 지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와 전남지역 9개 읍·면도 신속히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올해부터 국고 지원 피해 기준액이 대폭 상향돼 많은 피해 지역이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피해액이 10억원 이상인 시·군에 대해서도 국비 50%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농어가의 유일한 보호장치인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재 50%까지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금 할

증률을 30% 이내로 완화해달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북극항로의 성공적 개척을 위해 대한민국 2대 항만인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중점 육성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화물의 99%가 원유·LNG 등 비컨테이너 화물인데 여수·광양항은 이러한 비컨테이너 화물 운송에 특화된 항만이어서 산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독보적 경쟁력을 갖춘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김영문 前 사회통합비서관

이재명 정부·국회 가교 역할 기대

광주시는 3일 “문화경제부시장에 김영문(사진)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통합비서관을 4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사회통합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재정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하는 등 중앙행정과 정당 실무에 정통한 정책전문가다.

광주시는 김 내정자의 풍부한 정부 감각과 균형 잡힌 리더십, 이재명 정부·국회와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광주의 문화·경제 분야 도약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사회통합비서관 재임 당시 시민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조정 역할을 수행, 문화예술계·경제계·시민단체 등



다원적 주제가 얽혀 있는 문화·경제 정책 분야에서 갈등 조정과 협력구조 구축에 강점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당정 간 정책 협력 및 예산 확보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김 내정자의 행정 전문성과 통합 리더십은 민선 8기 시정방향인 문화·산업 균형 발전과 지역 공동체 통합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내 신산업 유치,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道, 고수온 피해 대비 양식어가 긴급 지원

예비비 10억 전복 등 판로 확대 활용

전남도는 3일 “연일 지속되는 고수온에 따른 전복, 조피볼락 등 주요 양식 어류 피해 최소화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10억원을 양식어가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고수온 취약 어종인 전복, 조피볼락

의 가공·유통 비용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를 통해 산지에 적체된 200여의 물량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도는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지 생산 어가에서 전복·조피볼락 등을 직접 매입, 이를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방침

이다. 예비비 지원 외에도 지역 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 수산물 활용 꾸러미 지급, 대규모 소비처 발굴·지원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사업을 추가로 펼치고 고수온 대응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며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양시원기자

특별재난지역 담양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전남도는 3일 “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한 담양군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22

일로부터 2년간이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에 피해복구 등

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신청은 해당 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양시원기자

알고당시다

개인형이동장치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벌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벌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벌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벌칙금 10만원

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EADOT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